

주요 국정홍보 ①[세계 최고 경영환경 조성 최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S-OIL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 축하 3.9.  대한민국정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세계 최고의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②(2030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3.11.10.

최종 결정의 시기가 9달 남았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후보국의 유치력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OE)의 현자설사가 실시됩니다.
심사인에게 우리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경쟁국과 차별화된 부산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023. 11.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석(가림) 044-203-291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㉞(장애인 서비스 맞춤형으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1

개인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자립 주거결정권 강화

- ◎ 사는 지역에서 꾸준히 생활지원을 받도록
-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본인 의사에 따라
거주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결정권 강화
- ◎ 장애 상태·특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현행 → 5년 후)

복지서비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연구

2022년



본사업
시행

2026년

• 최단층 임대주택에겐 통합돌봄 서비스

제도·서비스
연구

2023년



통합돌봄
시행

2024년 4월

•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수



• 장애인 발달장애 지원대상 수



개인예산지원?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 추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 ◎ 검진시설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 디지털 헬스기기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서비스 수검률 및 이용률 (현재 → 5년 후)

건강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률 증진 (%)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3년

본사업 시행



2028년

3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전체 대상으로 확대(2024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등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달성률 (현재 → 5년 후)

보육·교육지원

• 일반교육 참여가능률(%)

82%



2023년



90%



2027년 목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누적)

53개

2023년



100개

2027년 목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4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인상,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매 촉진 등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 ◎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장애인 벤처 중소기업 지원**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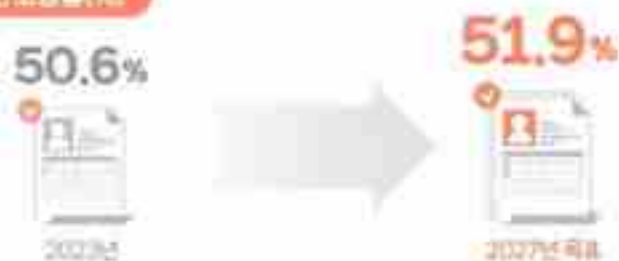
(현재 → 5년 후)

경제활동지원

• 장애인 평균소득



• 장애인 고용률



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

☉ 시군구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자원 확대

☉ 열린관광지 확충, 지역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참여율
(현재 → 5년 후)

체육·관광

• 생활체육 참여율(%)



• 휴면관광지 조성(누적)



6

문화예술시설 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배포,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 추진 등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 표준창작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 무인정보단말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 ☉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등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율 (현재 ~ 5년 후)

문화예술

• 예술활동 참여율(%)

1.2%



2023년



1.6%



2027년 목표

• 디지털 정보활용 수준(%)

82%



2023년



83.6%



2027년 목표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 ☉ 구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등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 관계부처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검토, 감염병 재난 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 강화를 (현재 - 5년 후)

이해관계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율(%)



8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문인력 증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이행방안 마련 등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 장애인임산부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률 (현재 ~ 5년 후)

권익증진

•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9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포함하도록 장애 개념 확대**
- ☞ **대통령 소속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추진**

장애 개념 확대

정혜기반

의학적
장애 모델



2023년



사회적
장애 모델



2027년

-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

정부는, 장애인 누구나 편견 없이 균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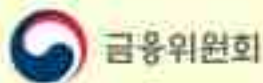


주요 국정홍보 ④(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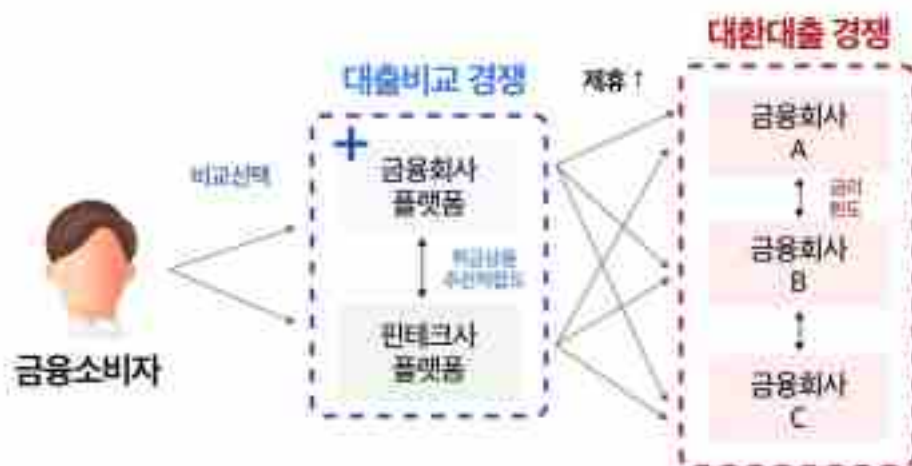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온라인에서 쉽게
더 낮은 금리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곧 세상에 나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비스 수준은 향상됩니다"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공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6(청년도약계좌 총정리 및 Q&A)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WHAT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WHY 왜 출시되었나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

* (국정과제9)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WHO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별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HOW 자산 형성은 이렇게!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HOW 자산 형성은 이렇게!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WHERE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추후 공고)



WHEN 신청은 언제부터?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HOW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❶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❷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❸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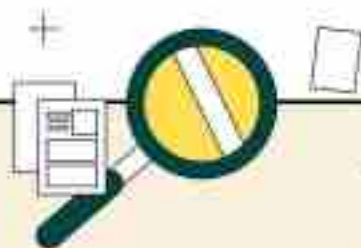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증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6(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번호판 절단에 강탈까지?!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를 개편해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합니다.**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1일 평균 21건

(73.2.20~3.3)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피해신고 접수 사례는?



변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44%

대매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6%

현물출자자
미기재

4%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신고 사례 01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
계약 해지 시,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

- A 화물차주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신고 사례 02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B 화물차주의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
약 100일간 운행을 못함.

- B 화물차주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신고 사례 03

운송사업자 팀장은 C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 2000만 원을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라고 요구·수취.
일하는 도중에 권리금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답을 회피.
이 후 차량 고장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변 지인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만 겨우 돌려 받음.

- C 화물차주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신고 사례 04

일을 시작할 때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것”이라고 하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 원을 수취.
이 후 설명도 없이 지입료 월 50만 원을 수취.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 원 수준에 불과.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 후 적자.
번호판 사용료는 되돌려 받지 못함.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으나 사장이 똑같은 사람이었음.

- D 화물차주

1.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지입차량의 명의를
운송사업자에서 화물차주로 변경!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량책임부담
책임 위탁자로 기재



2. 지입차주 개인운송사업자 전환

운송사업자에게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주는
번호판을 받아 운송사업자로 독립!



☑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
(번호판 부여)

☑ 지입료 부담 X

3. 화물차주의 운임 보장

컨테이너, BCT 차주는
표준운임제로 운임 보장



장기 운송계약은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4.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

번호판 사용료, 영의이전 대가, 대폐차 도장값 등
부당 행위를 법으로 근절

위반 시 처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3월 17일까지 운영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 제도개선 의견 제출처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c.go.kr/nlc/logis112.action)
신고접수 이메일(logis112@koila.or.kr)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비, 익명신고 가능

* 단, 지자체 행정처분 분석조정회의의 과정에서 신원 비공개시 피해사실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음



**지입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추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국가보훈제



보훈정책 소식

조선총잡이 김상옥 의사 등 60년 만에 훈격 재평가

Weiterlesen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건국훈장의 종류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짐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되어 온 대표 독립유공자



김상옥 의사 **대통령장, 1962**

1922년 조선 총독 처단과 총독부 폭파 등을 시도하다 체포를 피해
홀로 1,000명의 경찰 체포대에 맞서며 격렬한 저항 끝에 순국



박상진 의사 **독립장, 1963**

1915년 당시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하여 활동하다 체포 후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



이상룡 선생 **독립장, 1962**

1911년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1911년 경학사 사정,
1919년 군정부 총재 및 서로군정서 독판을 지냄



이화영 선생 **독립장, 1962**

1907년 신민회를 결성하고,
만주로 건너가 1912년 신홍강습소(신홍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했으며,
1932년 만주사변 이후 주만일본군사령관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고문으로 옥사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되어 온 대표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 독립장, 1962

190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최초의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1910년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일본군에 대항하는 의병 세력을 지원하다
일본군에 체포된 후 피살 순국



나철 선생 독립장, 1962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전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을 위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1907년 을사오적 처단을 주도하다 체포됐고,
1909년 귀국 후 단군교(이후 태종교로 개명)를 창립하고 초대 교주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킴



허버트 박사 독립장, 1950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4의 특사'로 활약
1912년 「뉴욕 헤럴드」에 105인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폭로했으며,
1942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해
일제의 한국 침략과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미국인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일부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는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그러나, 이러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훈법」 제4조 (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제기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역사, 법조,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⑧(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다
깜깜이 회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 ✓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❶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이 재정 정보를
쉽게 접하고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산하 조직은 아래의 경우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의무 공시

✓ 규약 ✓ 조합원 수 ✓ 결산서류 등

①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횡령, 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④ 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객관성 ↑ 신뢰성 ↑

**회계 감사원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구

- ✓ 규약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규정
- ✓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 ✓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①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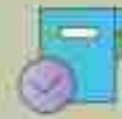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지출결의서 등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보존 기간 5년으로 확대**

→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과태료

☑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① 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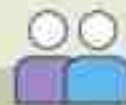
현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추가

조합원 1/3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

☑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 ✓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 ✓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해태
- ✓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금지
- ✓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 강요

☑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 ✓ 폭행·협박 등으로 他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 방해
- ✓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교섭 불가

불법·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주요 국정홍보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한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6개 분야에서 국가가 총력 지원합니다"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 ☑ 한국형 IMEC* 구축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로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

- ☑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원 이상 지원

2. 혁신인재 양성

- ☑ 대학 교육 유연화
- ☑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
- ☑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3.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 ☑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 첨단산업 관련
투자 추진(기업)

"6개 분야에서 국가가 총력 지원합니다"

4. 튼튼한 생태계 구축

- ☑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 추진
*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는 국내에, 양산은 해외에서
- ☑ 핵심 소부장 품목 국내 생산 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5. 투자특국(投資特國)

- ☑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 ☑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
- ☑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6. 국익사수 통상외교

- ☑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 설정 주도 및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 대응
- ☑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 방지(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첨단산업을 업종별로 육성합니다"



1. 시스템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2026년까지 340조원 투자)

-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 ☑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 ☑ 세제·제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 생태계 업그레이드
- ☑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2.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2026년까지 62조원 투자)

- ☑ 세제·금융 지원
- ☑ 차세대 기술 선제 준비 및 OLED 기술력 제고
- ☑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000명 양성

"첨단산업을 업종별로 육성합니다"



3. 이차전지

2030년 세계 1위 도약(2026년까지 39조원 투자)

- ☑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 60GWh 이상 확보(-2025년)
- ☑ 초격차 기술 선점
- ☑ 핵심광물 확보 및 통상현안 대응

4.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2026년까지 13조원 투자)

- ☑ 민간 투자 밀착 지원 및 연 2000명 이상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 탄소규제에 대응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첨단산업을 업종별로 육성합니다"



5.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2026년까지 95조원 투자)

- ☑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 ☑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 양성
- ☑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미래차전환 특별법 제정)

6. 로봇

글로벌 첨단로봇 제조국 진입
(2026년까지 1조 7000억원 투자)

- ☑ 첨단로봇 핵심기술 확보
- ☑ 규제 개선 및 대형 실증과제 추진
- ☑ 용접, 조리, 돌봄 등 신시장 진출

주요 국정홍보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조성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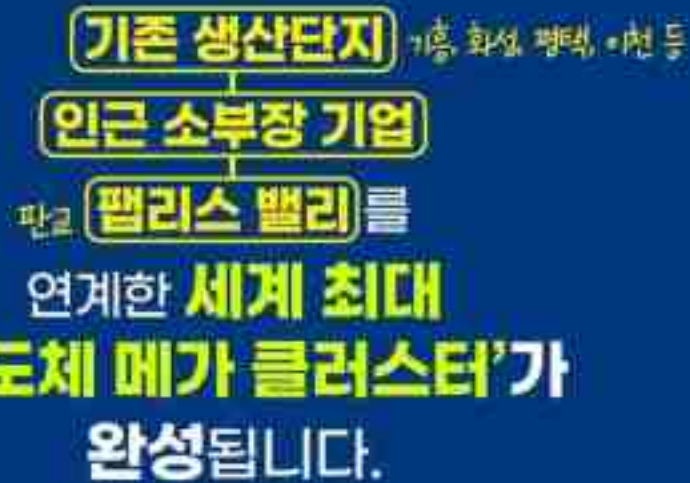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
- ⊕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150여개 유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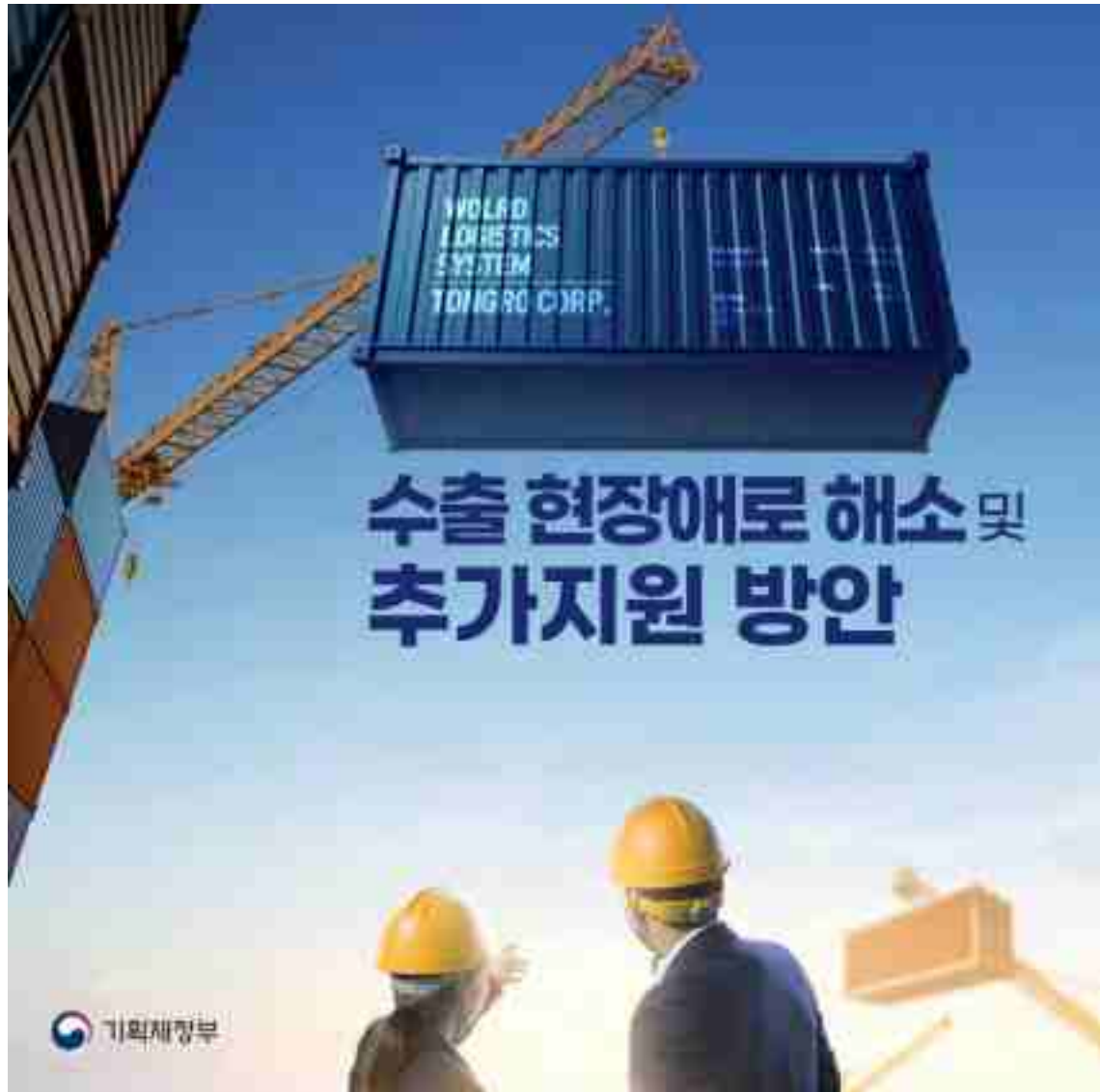


- ⊕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국내외 우수인재 집적
- ⊕ 기업-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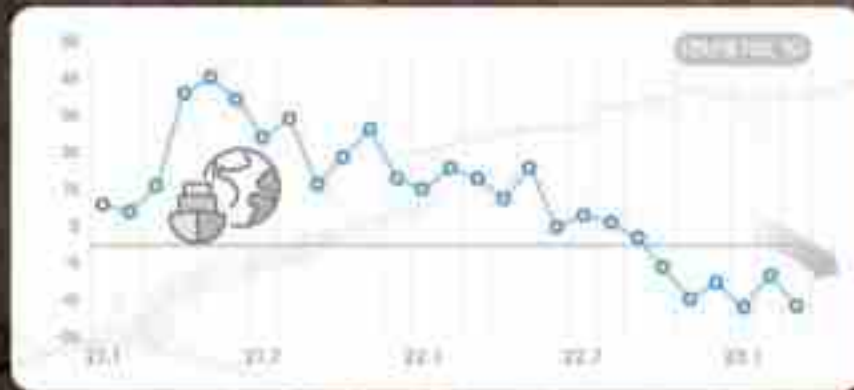
주요 국정홍보 ⑩(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수출의 악화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 전환



수출 반등을 위해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1급) 지정 등
전부처 총력 대응 체계 구축

경제부총리가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 마련



품목별 맞춤형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미래차

- 자율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속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지정 검토
-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출력 유도

조선

-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추진
- 무역보험공사 보험 비용 상향조정 (약 75~85%)

원전

- 원전 프로젝트 수급계약 체결 기자재 증소·증권기업에 대한 수급보험보험 조건 우대

무역금융·마케팅·인력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금융지원

-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공급 (최대 0.6% 우대 금리 적용, 3월~)
- 수출현장 무역금융 전달체계 점검·개선(4월)

→ 중소기업의 수출로의 접근성·활용도 제고

- 해외인증 취득시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 신설(4월)
- 해외 마케팅 시너지 강화를 위한 통영한국관 확대·첨부처 해외전시회 통합 플랫폼 구축



마케팅 강화



인력양성

- 민간기업들 우수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트랙 개발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⑫(통일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3월 15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권영세 장관 참석 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통일미래구상」 수립방향, 「담대한 구상」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해답은 통일에 있으며,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통일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다음의 세가지를 당부했습니다.

- ①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미래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를 이뤄나갈 전략 제시
- ②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기반 마련
- ③ 국민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가는 **소통의 통로 역할**



참석 위원들은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 재정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신통일미래구상**」 수립방향, 「**담대한 구상**」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신통일미래구상**」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상담까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신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들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채납자, 대출·보험사가 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



5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



10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

①
상담예약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loan.kinfco.kr
- 전화 예약 : 국번없이1397

②
상담 진행
3월 27일 9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③
당일대출



대출 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차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지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지원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전국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상담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 알선
및 구직 역량강화 교육 등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하세요!

-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내금융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금융기관은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로 대출지원 요지도 일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직접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Q1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요?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수준**입니다.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 이자 성실납부 6개월 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 입니다.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

주요 국정홍보 ⑩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식품부 입장]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하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수정 법률안은 쌀 공급과잉 심화, 과도한 재정 투입, 농업분야 투자 감소 및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우리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쌀 생산 능력과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국정홍보 ⑥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추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
 故 한상국 상사
 故 조천형 상사
 故 황도현 중사
 故 서후원 중사
 故 박동혁 병장
 (한민통 제1회 2019.05.24)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이장기 준위
 故 최한권 원사
 故 남기훈 원사
 故 김태석 원사
 故 윤규석 원사
 故 김경수 상사
 (한민통 제2회 2019.05.25)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안경환 상사
 故 김종현 상사
 故 민평기 상사
 故 최경환 상사
 故 정종윤 상사
 故 산선준 상사
 (한민통 제3회 2019.05.26)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박경수 상사
 故 강 준 상사
 故 박석원 상사
 故 임재엽 상사
 故 손수빈 중사
 故 신헌빈 중사
 故 조정규 중사
 (한민통 제4회 2019.05.28)

제55회 서해수호의 날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으로
기억하는
대한민국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방일민 중사
 故 조진영 중사
 故 문영욱 중사
 故 박보람 중사
 故 차근식 중사
 故 이상준 중사
 故 장진진 중사
 (한민통 제5회 2019.05.29)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이상희 하사
 故 이상민 하사 (사망)
 故 강현구 하사
 故 정범규 병장
 故 김선명 병장
 故 안동열 병장
 故 박정훈 병장
 (한민통 제6회 2019.05.30)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서승원 중사
 故 서대호 중사
 故 박성균 중사
 故 김동진 중사
 故 이용상 하사
 故 이상민 하사 (사망)
 故 이재민 하사
 (한민통 제7회 2019.05.31)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김신호 병장
 故 강태민 상병
 故 나현민 상병
 故 조지훈 상병
 故 정태준 일병
 故 장철희 일병
 (한민통 제8회 2019.06.01)

원안함 피격
일몰 공격 구조작업 중 전사
 故 한주호 준위
 (한민통 제9회 2019.06.02)

원안함 피격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
 (한민통 제10회 2019.06.03)

주요 국정홍보 ⑩[한미 문화동맹을 시작합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K-인문학, K-공연

새로운 한미동행 70년을 이어갈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를 확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미 청년들이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영화, 도서 등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 청취 및 토론(4. 28. 금)~ 3회)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 한미 청년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문학 강연 진행(6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사물놀이 강의 운영, 무용 전공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공연 추진

'K-뮤지컬 로드쇼' 한국 창작뮤지컬 신진예술가의
미국 진출 지원(10월, 미국 브로드웨이)

K-컬처

미국 MZ세대가 열광하는 'K-컬처'로 한미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5.10. 미국 링컨센터)

소프라노 조수미 참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8.11. 미국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국립무용단 미국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목향' 공연(10월)

백남준 다큐멘터리 상영회 개최(4.12. 미국 링컨센터)

'K-인플루언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현장 취재

* 한미동맹 70주년 K-컬처 홍보를 위해 매년 국내와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미국인 청년 유망한 인플루언서

K-콘텐츠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시장인 미국,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을 확대합니다

미국 '라이선싱 엑스포' 국내 캐릭터 업체 참가 지원(6.13~15)

'K-콘텐츠 엑스포 in USA' 한미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LA에서 개최(9월)

'B2B 테마파크 산업 박람회' 국내 아케이드 게임사의
박람회 참가 지원(11.14~17)

'아메리칸 필름마켓(AFM)' 국내 영화업계의 세일즈 지원 및
교류 촉진(10.31~11.5)

K-관광, K-스포츠

‘BTS’, ‘오징어게임’ 등 인기에 힘입어 방한관광객 1위 국가는 미국,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K-관광 로드쇼’ 한류 콘텐츠 축제 ‘KCON(케이콘, 8.18~20)’과
연계 개최(18일, 미국 LA)


태권도 시범단 파견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화제가 된
태권도의 매력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플로리다, LA 등
미국 4개 도시에 전파

한미동맹 70주년 의미 전파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미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전파합니다**

한국전쟁 고전영화 특별상영회 참전용사와 가족 초청,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감독)> 특별상영회 개최(7월, 용산 전쟁기념관)

KTV 방송 프로그램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사를 다룬 3부작 프로그램 방영(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 문화동행’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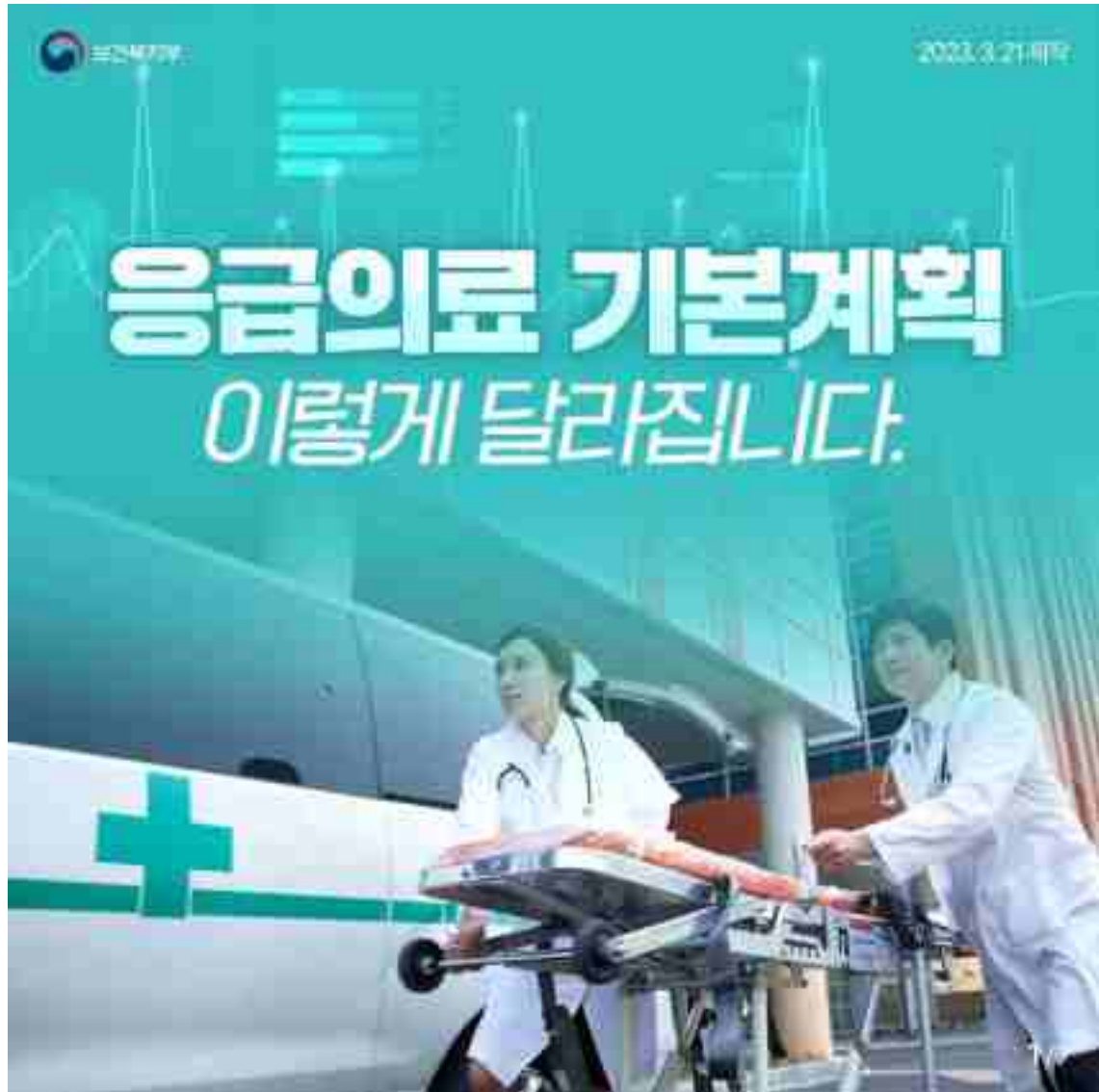
양국 교류 협력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국정홍보 ①(응급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119신고·이송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 ✓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평소 환자 수용이 잘되는 병원으로 이송

이렇게 개선됩니다

- ✓ 구급차 내 심전도 측정 등을 통해 **증상들 상세하게 파악**
- ✓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도구(Pre-KTASI)에 따라 **중증도 분류 실시**
- ✓ 종합상황판 정보에 따라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 ✓ 중증도 분류결과 및 지역별 이송자침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 ✓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료진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가 자주 발생
- ✓ 응급실 수용은 가능하나 관련 당직 전문의 부재 등으로 후속 진료는 불가능. 이로 인한 타병원 전원

이렇게 개선됩니다

- ✓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보를 사전에 **종합상황판에 입력**
- ✓ 119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원지를 수용**
- ✓ 중증응급질환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
(특인집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지역내 소관당직 병원 이용)
- ✓ 해당 병원에서 후속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응급전원합진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원**

소아 응급진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존에는

- ✓ 인근에 아간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타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에 방문, 장시간 대기 후 진료

이렇게 개선됩니다

- ✓ 소아전문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증상 상담 가능**
- ✓ 외래진료가 필요한 가벼운 증상일 경우,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 가능
- ✓ 중증응급이 의심될 경우, **인근 응급의료기관 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진료 가능
- ✓ 고난도 최종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이송 연계

재난 응급의료(사전대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 ✓ 의사, 구급차 등 응급의료 인력, 응급이송수단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
- ✓ 재난대응교육을 받은 적 없어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어려워하는 보건소장

이렇게 개선됩니다

- ✓ 시도별 행사 및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최자 없이도 **지자체 중심으로 응급의료 대비 가능**
- ✓ 관리자 교육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보건소장**

재난 응급의료(상황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 ✓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보건소 및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지연
- ✓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경찰 등 현장인력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출동이 어려움
- ✓ 보건소장에게 의료적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렇게 개선됩니다

- ✓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 여부 판단**
- ✓ 재난안전통신망(IPS-NT)을 활용한 **현장 인력 간의 소통 강화**
- ✓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DMAT(재난의료지원팀)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등 의료적 역할을 위임**



정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신속·정확·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⑩(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3.28.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 반드시필요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의 국내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⑩[착한소비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Boom-up 내수 불업 패키지

한국은행 내수충진 패키지 지원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



① 릴레이 이벤트

500여개 행사이벤트
국제행사 등 연중 개최



② 대대적 할인행사

유통·유흥시설 등 전방위적
업체 동참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③ 실속 정부지원

교통·숙박·문화 등
필수 여행비 지원

지역축제④ 스케일업

테마별 지역축제
개최·홍보 강화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내국인 국내소비 기반 강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충



문화비·관광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기업 문화·업무추진비
인정 항목 확대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 도입
기후청년법

여행 편의 제고



민간사업 촉진
비행 수송 안전 등
증가 활성화



여행 전화량 근무제
확산 지원



정부지원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진흥의 제고
국제 경쟁력 확대



입국 및 여행여건 개선



K-ETA 한시면제(22개국)
환승 무비자제도 복원



증일 항공사
국제항공편 신속 증편



고속버스·기차 예매 시
해외 결제결제불 지원

K-컨텐츠 확충



K-Pop

전국 K-pop 콘서트 투어



K-푸드

한식관광 활성화



K-의료

한국의료 서비스관광 패키지



K-쇼핑

Korea Duty-Free Festival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행사관광승용 주차 및 지원방안 안내



01 지역상권 활성화

- ① 뽕맛 동행축제 개최(5월)
- ② 워커힐 유니온하이몰 지역상권 협연회 개최
- ③ 건대시장 참여보상 제공

02 소상공인 지원

- ① 건대시장 입주전반 손금한도 확대 지원
- ② 은누리 상점권 구매한도 상향
- ③ 공공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범

03 생계바·주거비 부담 경감

- 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실시
- ② 금융 불신상환 공경 활성화
- ③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대응

“일상에 땀표를, 귀족에 본기를, 경제에 활력을”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⑩[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4년도 예산을 벌써 편성한다구요?

예산 편성 절차



*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확정(3.28)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건전재정기조란?’

국민의 세금 남비 NO!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학기술·전략산업 육성
- ☒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①



1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 ✓ A·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2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

-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②



3

경제체질·구조 혁신

-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 지역소멸대응·지방 시대 구현
-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 ✓ 미래 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 ✓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 ✓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 일류보훈·재외동포 지원 확대
-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4년 재정혁신 방향

3대 재정혁신 추진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집행 부진, 성과 미흡한 사업예산 → 축소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부당사용 시 → 고강도 패널티 부여
- 복지사업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 필수 소요만 한일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적극 발굴
- 유희·저항용되는 국유재산 →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농식품부, 지원 규모 확대!

'천원의 아침밥'

☐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생 지원 강화

☐ 4월 내 참여대학 추가 모집 공고 및 선정 추진

※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대학에 발송하는 공문 참조 / 044-861-8864

1 지원 대학생 수

당초
69만 명



변경
150만 명(+81만 명)

2 식대 지원 예산

당초
778백만 원



변경
1,588백만 원(+810백만 원)

주요 국정홍보 ㉔(6월 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한덕수 총리,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모두발언 3.30..

대한민국정부

6월 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거듭납니다

강원도는 개발의 제한요인이었던
지정학적 특성을 성장 동력화하고
강원도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 [정부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했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

☑ 2017년~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

☑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

본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①시민적·정치적 권리, ②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③취약계층, ④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알이 드러나야 합니다. (중략)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 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2024년 5월 28일)



정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북스 (www.unikorea.go.kr/book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발표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결혼지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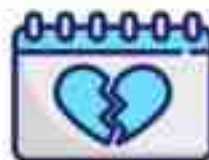


자금부족 29%

고용불안정 15%

출산양육부담 13%

출산포기 사유



경제불안정 37%

양육비용 25%

주거 10.3%

돌봄부담 8%

난임 2%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 수준 돌봄과 교육

튼튼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제 보육 대폭 확대
- 유보통합 추진 및 놀봄학교 전국 확대('25년~)
-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으로 모든 아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보장

양육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해소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육아기 재택근무 법적 근거 마련
- 부모 맞돌봄 위한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가족친화적 주거 지원 강화

가족과 아이 모두 좋은 주거서비스

신혼부부, 자녀양육가구 주거혜택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신혼부부·자녀양육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공급 확대
-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 자녀 출산 시 공공주택 입주기회 확대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등 양육비용 부담 완화

가족친화적 재정·세제 확대

부모급여와 자녀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 일하는 부모 대상 자녀장려금(CTC) 지급액·지급기준 개선
-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 마련

임신부터 영아기까지 건강 보장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건강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전후,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및 난임휴가 확대
-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윤석열 정부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발표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conomic and Labour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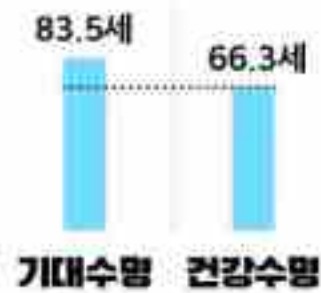
노년부양비

(단위: 생산가능인구 백 명당 명)



기대·건강 수명

(2020년 기준)



청년세대 미래부담
가중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증가

사전예방 건강 관리 및 돌봄 중요성 대두
▶ 돌봄·의료·고용·주거 혁신 필요 ◀



의료-돌봄 연계 혁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보장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e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을 연계합니다.



- 재가돌봄서비스와 의료-돌봄 자원연계망 통해 '노인 의료-돌봄 연계 모형' 정립
- 1차 의료기관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사전예방 건강관리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맞춤형 주거지 공급,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무장애 설계, 돌봄 서비스 결합된 고령특화 주택 확대
- 수도권 은퇴자 등 지방 이주 정착을 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논의를 시작합니다.



-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 자율적 계속고용 제도 확산 지원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사회서비스 혁신

고령친화기술 활용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재가돌봄서비스와 의료·돌봄 자원연계망 통해 '노인 의료·돌봄 연계 모형' 정립
- 1차 의료기관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사전예방 건강관리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시스템 점검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근거와 데이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 사회보장제도의 연령기준 재점검 착수